

# 주요국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시사점

한정희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현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크게 한은 특용 등을 통해 금융 기관의 대출 여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한은 특용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일단 어느 정도 시중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쇄 부도로 누적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1월 하순에 출범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실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부실채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금융 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금융 기관의 자율성이 상당 정도 제약받아왔던 점과 현재의 부실채권 규모를 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부실 금융 기관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면서 국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7년 6월말 현재 금융 당국이 공식 집계한 일반 은행<sup>1)</sup>의 부실 여신 총액은 4조 9,713억 원으로 총여신 가운데 1.6%<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하지만, 대출 이자가 감면 또는 면제되거나 원리금

## 우리나라 부실채권의 심각성

### 1) 부실채권의 현황

최근 30대 그룹까지 연쇄적으로 부도를

의 상황이 장기 유예된 산업 합리화 연관 여신은 1990년의 경우 10% 이하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실채권 규모는 공식 발표된 수치를 크게 상

〈표〉 부도 대기업 순여신 현황

(단위: 억 원)

그룹명	은행	종금사	보험·리스·금고	합계
한보	46,259	750	5,609	52,613
삼미	8,118	27	13	8,158
한신공영	5,670	580	1,150	7,400
진로	14,147	8,304	3,146	25,597
대농	7,185	3,564	703	11,452
기아	49,748	24,640	7,845	85,233
쌍방울	1,744	4,462	1,074	7,280
태일정밀	3,427	2,757	1,575	7,759
합계	136,298	48,084	21,115	205,497

주: 1997년 8월말 현재.

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7월 이후 기아 부도 등 부도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공식 집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부실채권의 규모는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1997년 8월말 현재 부도난 대기업의 금융 기관에 대한 순여신 총액이 무려 20조를 넘는 것을 볼 때, 부실채권의 규모와 심각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2) 부실채권의 경제적 심각성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는 금융 기관의 자산 운용 방식을 왜곡시킴으로써 문

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부실 금융 기관은 실제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동원하거나 이미 문제가 있는 차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계속 대출을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국면 전환을 위하여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어 경제의 안정 기조가 일시에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에는 한보 사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증가가 경제에 치명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는 은행 자산의 고정화를 가져와 은행의

1) 시중 은행 및 일반 은행.  
 2) 총여신 대비 부실 여신의 비율은 1990년말 2.0%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6년 말에는 0.8%까지 낮아졌으나, 금년 들어 다시 급상승하는 추세임.  
 3) 은행감독원(1997. 9), 「감독 업무 정보」, 제187호 참조.

유동성과 수익성을 침해한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 징후 기업들에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억제하게 된다. 이는 시중 자금 시장을 경색시켜 건설한 기업마저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부도가 지속되면 금융 기관마저 파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만약 금융 기관까지 파산하게 되면 지급결제시스템이 붕괴하는 신용 공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기아 사태 이후 거액의 부실채권이 생긴 종금사들이 자금 회수에 급급하고,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추가 지원한 자금마저 은행이 부실해진 제2금융권에 자금을 환류시키기를 꺼리고 있는 등, 시중 자금 시장이 심각하게 경색되고 있다. 그런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이 연쇄 부도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아그룹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연쇄 부도를 막겠다는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들어 쌍방울그룹과 태일정밀이 화의 신청을 하고, 뉴코아그룹이 부도 위기까지 몰리고, 건설한 중견 기업인 바로크가구마저 자금 압박으로 부도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부

도 유형이 초기의 경영 실적 악화에 따른 도산(bankruptcy)에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도(default)로 이어지고 있어, 부실채권이 야기한 금융 메커니즘의 악순환이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은 크게 한은 특용등을 통해 금융 기관의 대출 여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정부는 상장 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일부 은행이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봉착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2조 원 가량의 특별 자금(특용)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경제원은 오는 11월 하순 출범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를 통해 올 연내에 4조~4조 5,000억 원(매입가 기준 2조~2조 5,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향후 5년간 18조~20조 원의 부실채권(무담보채권 제외)을 정리하기로 했다.

혹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한은 특용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일단 어느 정도 시중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쇄 부도로 누적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11월 하순에 출범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외국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요국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

### 1) 부실채권 정리 방식

부실 금융 기관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정리 유예 방식, 청산 방식 그리고 대차대조표 개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리 유예 방식이란 부실 채권의 문제가 일시적이고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통상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일본의 금융 감독 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은행의 손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성공 여부는 거시

경제 사정에 크게 의존하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둘째, 청산 방식이란 부실 금융 기관을 파산시켜 자산을 분할 매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의 신용 관계의 손상과 상당한 자산 가치의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규모가 작은 금융 기관을 정리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

셋째,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대차대조표 개편 방식이다. 부실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개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부실 금융 기관에 자본금을 직간접적으로 증대·보강해주는 것이 자주 사용된다. 즉, 신규 자본금을 직접 투입하거나 보증 제공을 통해 자본금 증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보통 부실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후 부실 금융 기관과 건설한 금융 기관과의 합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매수·승계 방식(purchase and assumption transaction)'으로 불리고 있다. 세번째로는 부실 금융 기관의 채권자가 채권의 대폭적인 삭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부실 금융 기관의 자산과 부

채의 재편성 과정은 과잉 인력의 제거와 업무 조정 등 비용 절감 노력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 2) 미국

1986년 이후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서부를 중심으로 한 석유 산업의 심각한 불황과 지역 경제의 악화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저축대부조합(Saving and Loan Association: S&L)의 부실채권이 대폭 증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80년대 후반 부실채권이 야기한 금융 불안을 제거하고 이후 금융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①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의 설립이고, ②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이다.

정리신탁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 188억 달러와 RTC의 자금 조달 기관으로서 RTC와 동시에 설립된 정리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 대금 300억 달러 및 연방주택대부은행의 각출금 12억 달러를 재원으로 1989년에 한시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리신탁공사는 부실 저축대부조합의 자산을 인수하여 매각 처분하는 방식으

로 부실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였는데, 이 과정에 관련하여 요상각채권의 손실 보진과 정리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금리 보조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리신탁공사는 대규모 파산 저축대부조합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산의 평가 및 가격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보유 자산을 근거로 증권화시켜 매각함으로써 부실 자산의 유통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80년대에 발생한 저축대부조합의 위기에 대응하여 감독 당국은 자기 자본 비율 규제 및 회계 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특별 조치를 강구하였지만, 이러한 유예 정책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금융 당국은 부실 은행에 대한 감독 당국의 조기 개입을 의무화하여 은행의 부실화를 적기에 시정하고 문제 은행의 조기 적출 및 폐쇄를 통한 예금보험기금의 감소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FDICIA*)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하여 이른바 조기시정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를 도입하였다. 조기시정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뒤 3등급(위험 가중 자기 자본 비율이 8% 미만 또는 단순 자기 자본 비율이 4% 미만) 이하일 경우, 감독 당국이 해당 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배당 제한, 총자산 감축 및 은행 폐쇄 등의 시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3) 일본

80년대 들어 금융 자유화가 촉진되면서 금융 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등 금융 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하여, 부실채권 처리 문제가 일본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상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162 개 금융 기관의 79.3억 엔을 출자하여 공동채권매입기구<sup>4)</sup>를 설치하여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및 담보 부동산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동기구의 주 업무는 출자 기관의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

입하거나 담보 부동산을 취득·매각하는 일인데, 매입 자금은 해당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으로 하였다.

부실채권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이 부동산담보채권의 매각을 공동채권매입회사에 신청하면 공동채권매입회사는 이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한다. 그리고 제3자가 담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 대금은 채무자에게 지불되어 매입 회사에 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매입 회사는 매입 자금으로 대출 받은 은행 융자의 일부를 은행에 변제하게 된다. 이때 매입 회사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가격판정위원회가 판정한 시가로 매입하고, 매입을 의뢰한 은행은 매각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매각손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공동채권매입기구가 동채권을 재매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대출해준 매입 의뢰 은행의 대출 자금이 고정화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4) 동기구의 존속 기간은 10 년이고, 관련 채권의 매입 기간은 설립 후 약 5 년으로 설정되었음.

대금이 고정화되어 금융 기관의 경영 상의 어려움이 심해짐에 따라, 일본 당국은 공동채권매입기구의 부실채권 매입 자금으로 大藏省이 관리하고 있는 우편예금, 후생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大藏省은 금융 기관의 신탁 자회사로 하여금 모은행으로부터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한 담보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소액 증권으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신탁 자회사를 통한 부실채권의 유동화는 모은행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함으로써 경영 기반의 건전화에 도모할 수 있고, 업무 취급 범위가 제한된 신탁 자회사의 경우 부실채권 유동화를 통해 업무 영역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어 수익 증가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핀란드와 스웨덴

1990년 이후 핀란드 경제가 구소련 경제의 혼란에 따른 對구소련 수출 격감과 국내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의 실시로 급속한 경기 후퇴를 겪자 국내 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면서, 국내 경기 호

조시에 대출을 크게 늘렸던 금융 기관은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게 되었다. 1991년 9월 핀란드의 제4위 은행인 Skop은행이 경영 위기에 빠지자 금융 위기로 인식한 핀란드 중앙은행이 同은행을 직접 매수하고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부실 금융 기관에 공적 자금으로 신규 자본을 주입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둘째는 금리 자유화로 너무 좁아진 예대 마진을 확대시키고, 셋째는 정부보증기금(GGF)을 설립한다.

핀란드 중앙은행과 정부는 파산 은행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보증기금(GGF)을 설립하고 파산 은행을 인수·합병·매각하는 과정에서 총 약 167.4억 달러(GDP의 20% 정도, 국민 1인당 1,610 달러의 비용 부담)의 구제 자금을 투입하였다. 핀란드의 금융 위기 극복은 핀란드 은행 감독 당국이 일찍부터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였고, 공공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등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신용 불안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상업 은행들은 과거 지가 상승기에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려온 결과, 90년대 초반 버블 경기

가 붕괴되고 지가가 급락(1989년 대비 상업 용지 40% 이상, 주택 용지 20~25% 하락)함에 따라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게 됨으로써 금융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1992년 11월 스웨덴 정부는 금융 기관 구제 방법의 가이드라인과 정부에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강화 시책 법안'을 마련하였다.

同법안에서 제시된 금융 기관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각 대상 채권에 대해서 정부 보증을 제공하고, 둘째는 후순위 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용자를 하고, 셋째는 신주 발행 등 자본 조달을 지원하거나(정부 보증 포함) 직접 정부로부터의 자본 주입을 가능케 했으며, 넷째는 부실 자산을 별도 회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 당국은 경영 과탄이 심각한 Nordbanken(자본금 기준 3위)과 Gota Bank(자본금 기준 5위)를 국유화하고 구제 금융을 지원하였다. 스웨덴 정부 당국은 Nordbanken이 보유한 670억 크로네(87억 美 달러 상당)의 부실채권을 1993년 1월 정부가 흡수한 'bad bank'라 불리는 Securem社로 이관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Gota Bank의 280억

크로네(36억 美 달러 상당)의 부실채권도 다른 국영 회사에 Retriva社로 이관할 계획이다. 同법의 최대 특징은 부실 은행 구제를 위한 재정 지원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에 의한 신주 인수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한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국유화 금지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

### 1) 외국 사례의 시사점

부실채권과 그것으로 비롯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첫째, 부실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전된 부실채권이 고정화되지 않고 다시 자산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 위험을 고려한 적정 가격에 유통될 수 있을 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보증회사채의 수요도 지극히 미비한 것으로 보아 부실채권이 유동화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채권 발행시 정부 보증을 확대하거나 공공 자금을 통한 수요 증대를 꾀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실채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금융 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의 강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금융 기관이 파산의 궁지까지 몰려 금융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감독을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일본도 199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악화된 금융 기관에 금융 감독 당국이 조기에 적극 개입하여 건전 금융 기관과의 합병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분할·매각시 발생하는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당해줌으로써 부실채권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금융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 내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실 금융 기관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계 은행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 자회사 및 점포 매각 등을 통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적자 결산과 우선주 발행을 통한 불배당 정책을 실시하여 단기간 내에 부실채권 문제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2)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방향

우리나라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24일 성업공사내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여 운영<sup>5)</sup>할 방침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는 3조 5,000억 원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모에 따라 배분된 금융 기관 출연금이 5,000억 원, 한국은행

채권 인수 2조 원,<sup>6)</sup> 산업은행 용자 5,000억 원,<sup>7)</sup>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시장 금리로 발행하는 채권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일단 은행권 부실채권만 처리하고 제2금융권은 제외된다. 먼저 은행권 담보부채권은 담보 물건을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하되 임금채권, 임차금, 조세공과금 등 미확정 선순위 채권은 사후정산된다. 매입 가격은 '(감정 가격 × 물건 종류별 평균 낙찰률) - (선순위 채권 + 경매 집행 비용 + 담보 물건 관리비)'라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은행과 성업공사가 합의하면 산정 가격의 10%까지 가감된다. 무담보부채권의 경우 회수 의문 및 추정 손실은 채권가액의 1%, 상각채권은 채권가액의 0.5%이다. 상각채권이란 대손상각이 완료된 채권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고 은행이 회수 권리만 갖고 있는 채권이다. 장기채권은 산업 합리화 지정·법정 관리 등으로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이다. 장기채권은 현재 가치로 할인해 매입된다.

재경원이 파악한 은행권 부실채권 가운

데 매각 가능한 채권은 지난 8월말 현재 18조 475억 원이다. 여기에는 한보, 삼미 등 올해 무너진 기업의 물건이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물건, 국외 지점 취급분 등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은행권이 매각을 희망한 규모는 주택 758 건, 상가·빌딩 283 건, 토지 272 건, 공장 658 건 등 총 2,032 건에 16조 4,35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제 매입 예상 금액은 4조 8,500억 원이다. 매각 가능 채권의 26.9%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은행 유동성에 도움은 주겠지만 수치 보전에 큰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 기관별로 출연금의 6 배 내외에서 부실채권 매입 한도를 정하게 된다. 먼저 각 은행의 출연금은 해당 은행의 매입 한도로 5 년간 인정된다. 재원 가운데 2조 5,000억 원은 은행의 매각 희망 부실 채권 규모에 따라 매년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은행별로 매입 한도를 조정한다. 나머지 5,000억 원은 부실 징후 기업 자구 노력 대상 자산 매입 자원으로 별도 활용된다.

5) 5 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임.

6) 이 금액은 공사발행채권을 정부 보증 및 국회 동의를 거쳐 금리 연 5%에 5 년 거치 2 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인수하면서 조성됨.

7) 이 금액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5,000억 원을 현물 출자하고 산은이 연 8%의 금리에 5 년 동안 용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됨.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현금화가 용이한 채권부터 우선 매입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공사 부동산 신탁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경매 절차없이 공사의 담보 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장기채권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자금이 고정되므로 해당 채권은 정크본드를 통해 증권화·유동화하여 일반인 또는 기관 투자자에 매각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채권 정리 방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부실채권정리기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발생하는 2차 손실에 대한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성업공사가 지난 199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파악한 물건 종류별 평균 낙찰률은 아파트가 77.7%, 대지가 72.4%, 공장이 5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 소재 공장 등은 감정가액의 절반에 불과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부분이 금융 기관 출연금과 금융 기관이 인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구의 발행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 부실채권액의 일부가 부실채권정리기구 발행 채권으로 전환되는 셈이 되어 단기적으로는 금융 기관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同기금에 대해 한국은행 저리 융자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무담보부실채권이나 장기채권의 경우 정크본드화해서 시중에 유동화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수요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실채권정리기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 보증을 제공하고 한국은행이나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적절한 이자율에 인수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